

1930년대 말 일본의 만주 개발에서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정책

황기우*

<국문요약>

나치 독일의 완속기가 시작된 1938년은 오스트리아의 강제합병을 시작으로 팽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해였다. 팽창의 범위는 유럽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해 동아시아 내 유대인 난민의 급증은 나치로 하여금 독일의 팽창에 따른 향후 유대인 문제의 범위를 유럽을 넘어 동아시아로 확대시켰다. 나치 독일의 접근은 일본 민족에 대한 문화적 동등성을 매개로 하고 있었다. 즉 ‘문화의 축Kultur-Achse’이라고 하는 문화적 연대를 일본에 부여함으로써 일본이 가지고 있던 서구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적극 활용했다. 때마침 일본은 식민지 침탈을 위한 이론적 정당성을 ‘문명개화의 소명Mission of Civilization’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의 문화의 축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다. 따라서 만주는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중심지이자 서구 문화와 대등한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제어] 문명개화, 도시개발, 시민사회, 만주개발, 반유대주의, 사회진화론

* 황기우(E-mail: hwangkiwoo@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Freie Universität in Berlin
현직: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논문접수일 : 2016년 12월 26일, 논문수정일 : 2017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9일

The anti-Semitic Policy of National Socialist Germany in the Manchu Development of Japan in the late 1930s

Hwang ki-woo

<Abstract>

The principle of internal National Socialist cultural policies required adjusting Germany's relations with Japan in the context of an uncompromising cultural imperialism. National Socialist propaganda necessitated the integration of anticommunism and anti-Semitism into the developing Germany-Japan alliance on the occasion of the Anti-Comintern Pact in 1936 and the cultural agreement of 1938. In the Tripartite Pact of 1940, the National Socialist government aimed to situate anti-Semitism as a crucial cultural and ideological principle of the Axis alliance. National Socialist and Axis policies towards Japan were devised with an eye on the narrow context of the increasing presence of Jewish refugees in the Japanese-controlled areas of Manchuria.

[Keywords] *civilization, urban development, civil society, development of Manchuria, anti-Semitism,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세기 후반 만주에 대한 독일의 관심은 식민지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의 내용 차지하고 있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영토적 식민지 정책을 포기하면서 만주는 단순히 ‘콩’과 같은 원료 수입지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¹⁾ 그러던 것이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만주를 경제적 관심 이상의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나치집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특히 나치의 ‘국가발전 4개년 계획’이 끝나갈 무렵 만주는 극동외교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특히 1937년 2차 만주사변 이후 나치 정부의 극동외교의 무게중심이 일본 본토에서 만주로 뚜렷이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처럼 만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 대상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치와 만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일본과의 반공협정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1938년에 보여주었던 나치의 대일 외교는 단순한 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소련 봉쇄를 위한 만주의 지정학적 가치는 나치에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 나치의 만주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나치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협력보다 경제 그리고 문화와 같은 부분

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일본 정부가 1936년 독일과 ‘국제 반공 연맹’²⁾을 협의하면서 만주국의 승인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나치정부는 1938년이 끝날 때까지 만주국의 공식 인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 또한 만주와 독일 간의 무역수지가 독일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만주와의 관계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볼 때 만주는 나치에게 있어서 단순히 정치 경제 영역에서 일본과의 협상카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만주에 대해 히틀러가 영토적 식민지를 꿈꾸고 있었던 것은 단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치정부도 지난 바이마르정부와 마찬가지로 만주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특별히 영토적 식민지와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38년 이후 나치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에서 식민지 영토회복 혹은 영토 확보와 같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히틀러 집권 이후 만주에 대한 독일의 관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 시기는 1938년이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1932년 만주국 창설 이후 5년이 지나서야 만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1937년 이후 중국 대륙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 내 독일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권리는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38년 말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과거 동아시아 내 독일 식민지문제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다. 실제로 만주국 승인을 위한 독일과의 협상에서도 청도靑島 문제와 같은 독일의 기존 권리는

1) 1920년대 만주에서 수입된 콩은 독일 전체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 협상 내용에서 반공산주의보다 ‘반볼셰비키즘’이라는 표현이 더 많았다.

회담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영토적 야심을 포기한 대신에 만주에 대한 나치 독일의 관심은 기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38년부터 양국 간의 문화적 접근은 같은 기간 정치, 경제, 군사 영역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1938년 말이 되면 만주 내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일본과의 문화협력에 대한 나치 독일의 관심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 대한 나치의 문화적 접근이 강화되어진 배경에는 큰 틀에서 일본 근대화의 기본 원칙과 깊은 연관성에 있었다. 즉 일본 근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했으며, 그 모델을 독일에서 찾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나치 독일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독일이 일본과의 문화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1938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내 유대인 난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만주를 일본 민족의 전통적 색채 대신에 서구적 근대성으로 새롭게 연출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 내 지배계층이 서구 문화를 특별히 선호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근대화의 방향이 서구사회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본의 동아시아 식민지 정책에서 서구문화는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명 개화론(文明開化論)’을 내세웠고, 그 주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의 중심에 서구문화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근대성과 서구화를 동일시하는 믿음을 만주에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독일은 일본에게 매우 훌륭한 모델이었다.

일본의 서구화정책과 더불어 나치의 접근은 양국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문명개화론’은 그 뿌리가 서구문화에 있었고, 나치는 일본의 ‘문명개화론’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았던 반유대주의를 아시아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주는 나치에게 있어 반공주의와 함께 반유대주의를 동아시아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초기지였다. 특히 일본의 만주개발 계획이 1938년 이후 동아시아 내 유대인 난민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만주에 대한 나치의 관심과 정책변화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치의 대일 외교에서 만주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협력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한 나치의 이해와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만주 개발에 대한 나치의 기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주 개발에 적극적 모습을 보인 나치의 근본적인 의도와 만주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반유대주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만주 개발’에 대한 나치의 관심이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나치 독일과 반유대주의로 무장된 문명화 이론의 공유를 의미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겠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는 독일과 일본에 비하면 활발하지 못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장준호, 전진성, 이진모, 이경분 등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그들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후학들도 연구의 깊이와 함께 관심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진성 교수의 저서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기억과 건축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은 일본과 독일의 문화적 연대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양차대전 기간 동안 일본과 나치 독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며, 번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 현실과는 다르게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독일에서 매우 활발하며, 특히 독일 학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학계가 군사, 경제, 외교영역에 연구 중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독일 학계의 연구 영역은 철학, 종교, 정치사상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1970년대 이래로 게르하르트 크랩스(Gerhard Krebs), 마틴 베르트(Martin Bernd), 요제프 크라이너(Josef Kreiner) 그리고 테오 쪼머(Theo Sommer) 등이 나치 독일과 일본의 관계를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인츠 에버하르트 마울(Heinz Eberhard Maul)은 최근 들어 나치독일의 사상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베르트 마틴의 저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독일 연합』(die deutsch-japanische Buendnis im Zweiten Weltkrieg)은 양국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인츠 에버하르트 마울의 저서 『왜 일본은 유대인을 박해하지 않았나?』(Warum Japan keine Juden verfolgte?)는 나치 독일과 일본 간의 유대인 난민 문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일본 학자 중에서 미야자와 마사노리(宮澤 真徳)가 일본 내 반유대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만주 개발과 나치의 반유대주의 강화 노력 간의 관계를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나치의 대일 문화정책의 틀을 반공주의에 국한시키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과 독일의 비교사적 관점이 아닌 나치 독일의 대일 문화정책의 목적과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II. 일본 식민지 지배이론과 나치의 반유대주의

1937년 제 2차 만주사태가 발발한 이후 나치 독일의 외무부는 일본 식민주의(colonialism)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첫째,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중심지인 만주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둘째, 1938년 여름부터 동아시아 내 유대난민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추구했던 대동아 공영의 문화적 모델이 당시 수상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로에 의해 독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Kreiner and Marthias 1990, 349) 그런데 만주에 대해 나치의 관심을 높였던 세 가지 배경 중 유대인 난민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일본의 만주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미 1937년부터 나치독일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배경이었다. 따라서 만주개발과 관련해서 나치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1938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내 유대인 난민 유입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나치 독일은 중국대륙

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의 세 가지 사건을 유대인 문제와 결부해서 보고 있었다. 즉, 일본 근대화의 실험장이었던 만주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역할을 일본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치 독일 정부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Maul 2007, 35) 특히 1938년 가을부터 시작된 유대난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치 독일은 동아시아 유대인문제를 일본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치 독일에 입장에서 만주개발 계획은 일본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물론 히틀러 집권 초기부터 일본과의 교역과 정치적 협력과 정에서 반유대주의를 위한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노력은 독일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협력을 이끌었던 정부 산하 개별 부서 내 책임자들의 개인적 행동들이거나 민간 협력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실제로 일본의 만주개발 이전부터 일본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나치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1938년 이전까지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나치 독일의 동아시아 내 반유대주의를 위한 노력은 일본의 일부 학계와 문화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유대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려 한 것이 전부였다. (베를린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R 61440)

하지만 1938년 이후 나치의 대일외교에서 만주는 나치독일의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었다. 그리고 만주에 대한 나치 독일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적어도 1938년 이후 일본의 식민주의를 바탕으로 반유대주의를 새롭게 결부시키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치 독일이 만주를 바라본 시각은 근대 일본의 식민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마크 페티(Mark Peattie)는 일본의 식민정책을 메이지의 기본 원칙이었던 탈아입구(脱亜入欧)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Myers and Peattie 1983, 42) 그런데 마크 페티가 의미하고 있는 식민지 내에서 탈아입구는 제국의 중심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중심지와 식민지의 동등한 개발보다 그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발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마크 페티가 말하는 동아시아 식민지의 탈아입구는 제국의 완성을 위한 조건이며, 그 실현을 위해 일정한 의존지역을 필요로 한다. (Ibid) 이와 관련하여 제국의 중심지는 식민지민들의 정서적 저항이 강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경(東京)이 아닌 만주가 일본 식민지의 탈아입구를 위한 중심지로 최적이었다. 물론 장소만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그림을 이루는 도시개발과 제도 또한 제국의 중심지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했다. 그러나 제국의 중심지에서 진행되었던 근대화의 형식이 식민지 만주에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1923년 말 본토의 도시개발을 위해 마련했던 '제도부흥계획'을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개발을 위해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장준호 2000, 125-133) 물론 도시의 형태와 양식은 나치 독일의 수도 베를린과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제도부흥계획을 이끌었던 이케다 히로시와 고토 신페이는 프로이센의 도시를 선호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토는 독일 유학의 경험이 있었고, 프로이센 도시 양식을 타이완에서 구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진성 2015, 408-409)

그러나 만주 개발의 기본 형태가 프로이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 만주 개발에서 나치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던 것은 아니다. 나치의 적극적 노력을 이끌었던 요인은

일본의 식민주의 전략 그 자체에 있었다. 19세기 후반을 전·후해서 서구 식민지 전략은 언제나 제국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식민지 민과 제국 중심 간의 정치·문화·경제의 단절 혹은 상호성이 결여된 일방적이며 차별적인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였다. 즉 중심과 주변부가 단순히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는 언제나 식민지 저항의 근본 원인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이러한 식민지 민들의 저항으로부터 파생되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Gandhi 1998, 32) 결국 식민지 지배의 중심은 경성도 아니고 북경도 아닌 만주여야 했다. 그렇다고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식민지 착취와 차별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만주는 식민지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제국의 완성을 위해 동아시아 문화를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데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즉 만주는 일본 식민지 정책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였던 ‘문명화 이론’(Theory of civilization)³⁾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따라서 나치의 만주에 대한 이해는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히틀러 집권 후 나치는 만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계획과 생각을 자신들의 외교채널뿐만 아니라 수많은 준 민간외교인 ‘민족의 파수꾼’(Volksbeobachter)⁴⁾을 통해 대부

분 파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를 제외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자신들 세계관과 상당부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치 집권 초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반유대주의의 국제화를 위한 일본과의 공유노력은 1938년 이전부터 확인되고 있다. 나치 독일과 일본이 공유했던 문명화 이론은 19세기 후반 이래로 유럽의 확장과 당시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이론의 다원적 구조를 상실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편협한 이론은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30년대 나치 독일의 문명화 이론의 핵심이 반유대주의였다는 사실과 그것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당시 다른 식민지 지배 국가들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사실상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양국의 지식인들은 적어도 ‘문명’과 ‘민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일본이 생각했던 근대 식민주의 중심적 의미는 나치의 ‘문명이론’(Theory of civilization)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 근대 식민주의의 중심에는 ‘문화적 사명’(culture mission)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개념은 나치가 설정한 ‘민족’과 ‘문화’의 관계와 의미상으로 동일한 이해구조를 보이고 있다. 나치는 민족을 문화에 따라 3종류의 계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히틀러에 의하면 첫째, 문화를 창조하는 민족과 둘째, 창조된 문화를 유지하는 민족 그리고 셋째, 그 문화를 파괴하는 민족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 그리고 공존할 수 없는 민족을 의미한다. (Hitler 1933, 318) 여기서 공존할 수 없는 민

3) 19세기 서구 식민주의가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편협한 이론을 통해 나치 독일에 이어 일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은 국가나 민족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서구 사회의 특권을 1938년 말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교환을 했다. Prsenjit Duara,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Journal of World History* 12 (2001): 99.

4) 프로이센 시기부터 활동하던 민간단체이다. 주로 상사에서 무역이나 학교에서 교육활동하면서 외

국 정부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정보를 본국에 전달하는 일을 병행했다.

족이란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며, 지배민족은 아리안족을 의미한다. 물론 일본 식민주의가 말하는 '문화적 사명'에서 유대인을 위한 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식민주의는 '문명개화의 사명'(Mission of civilization)을 가진 일본 민족만이 그렇지 못한 다른 아시아민족의 구태를 말소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갱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로 탈바꿈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설정한 문명, 반문명, 야만의 3 계급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히틀러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의 공통분모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지위차이가 '민족'과 '문화'를 동일시하는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히틀러가 바라보는 '민족'과 '문화'의 관계는 민족을 인종적으로 바라보는 나치에 의해서 '인종문화'(Rassenkultur)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한다. '인종문화'는 반유대주의를 위한 사상적 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후반 일본 식민지 정책은 '근대화' 혹은 '문명화' 담론을 통해 나치독일의 반유대주의가 자리할 수 있는 사상적 공간이 가능했다.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1938년 일본과의 문화협정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그들의 '문명개화' 주장을 존중하기에 이른다. (Kreiner 1984, 276) 히틀러는 일본의 문명개화의 사명이라는 이름하에 반유대주의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고노에 후미마로 역시 일본의 미래를 나치 독일에서 찾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만주의 개발은 나치 독일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III. 히틀러 집권

초기(1933-1938) 나치 독일과

만주의 관계

나치독일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대륙침탈이 본격화 되면서 시작되었지만, 나치 정부의 외교 분야에서 실질적인 접근은 1936년 일본과의 만주국 승인을 위한 협약 과정에서 시작된다. 만주국 승인 문제는 '승인문제'한 가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치 독일의 외무부 장관 리벤토르프(Libbentrop)는 일본의 만주국 승인 요청을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협상카드로 사용했다. 그 중 하나가 '반공협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나치 독일의 '북중국 계획'(Nordchinaplan)이었다. 양국 간 반공협정에 비해 북중국 계획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사실 북중국 계획은 국제 반공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즉 나치의 북중국 계획은 표면적으로 일본의 '만주개발 5개년 계획'⁵⁾에 대한 경제적 관심에서 기획된 것이지만 반공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악화되어가던 일본과 소련의 관계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이후 국제적 고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제 반공주의 연맹을 위한 협정은 리벤토르프의 의도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만주국 승인이라는 협상카드는 여전히 쓰이지 않았다. 나치는 더 많은 것을 일본으로부터 얻기 위해 만주국 승인카드를 남겨두었다. 경제협력 분야와 반공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거론된 문화협력 분야에서 만주국 승인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1936년 말부터 1938년 여름까지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에서 만주국 승인 문제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나치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5) 제 2차 중일전쟁 전 일본 군부(관동군)에 의해 추진되었다.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경제 협력 이외에 군사와 문화 등의 분야는 아직 시대상조였다. 이후 1937년 제 2차 만주사변이 발생하면서 기존 만주와 독일 간의 경협마저 잠시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1937년 말부터 독일의 레벤스라움(Lbensraum) 정책에 대한 동아시아의 불럭정책으로서 ‘대동아 공영’이 빌헬름스6)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계획은 나치 독일의 만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박현미 2006, 239-255) 특히 대동아 공영의 중심지가 될 만주가 베를린 외교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독일 외무부가 일본의 만주개발을 외무부 핵심 안건으로서 주목하기 시작 한 것은 지난 반공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치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움직임에 놓치지 않고 그것을 동아시아 내 자신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히틀러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었던 만주에 대한 투자가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독일의 만주에 대한 경제적 관심은 나치 집권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35년 독일의 경제기획단 대표들이 만주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만주국과 독일 간의 보다 확대된 새로운 경제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Kreiner 1984, 193) 확대된 교역량만큼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독일 측 경제인단은 특히 일본 정부의 만주개발이 독일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평가는 향후 일본과 나치 독일 간

의 만주국 인정에 관한 협상에서 중요한 동기로까지 작용했다. 그런데 1936년 이후 만주와의 경협은 나치 독일의 입장에서 단순한 경제적 교류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1936년 4월 30일 독일과 만주국 사이에 경제협력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일부로 독일과 만주국 사이에 외환관리 기구가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36년 독일과 만주국 간의 경제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은 매년 만주로부터 1억 엔 이상의 물품(주로 농산물과 원자재)을 수입하고, 그에 비해 만주는 2천 5백만 엔의 물품을 독일로부터 수입한다고 되어있었다. (Ibid)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엄청난 과잉생산을 만주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일본 본토 내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불균등을 감수하려는 나치 독일 측의 태도 변화는 반공협정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후 1938년에 일본의 문화협정을 계기로 또다시 나타난다. 결국 나치의 북중국 계획은 경제협력과 국제 반공주의 연맹을 하나로 묶는 계획이었다. 무엇보다 1936년 양국 간의 반공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나치 정부의 태도는 독일 경제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주에 대한 경제적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1936년 독-만 경협은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일본-독일-만주국을 잇는 삼국 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독-만 경협 조항을 보면 더욱 확실하다. 경협 내용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간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흑자와는 별개로 독일은 만주국으로부터 일본이 독일에서 얻는 흑자금액 이상을 상품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Ostasiatische Rundschau 1936,

6) 독일 베를린에 외교관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이다.

11, 17, 281)

이어서 일본정부는 독일과의 경협을 기존 관동군에 의해 진행되었던 만주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일본은 자신의 만주개발 계획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독일에 대한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강화해 나갔다. 1937년 9월 만주 중앙은행은 쾰른에 자리하고 있는 독일 상공회의소 오토 볼프 하우스에서 독일과 만주국 간 신용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한다. (Kreiner 1984, 195) 이 신용조약은 특히 독일 기계를 싼 값에 만주로 들여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지만, 사실 이 일은 일본 관동군이 주도하였다. 특히 중공업분야의 기계수입과 만주 내 중공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만주개발 이면에 있던 군비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때부터 독일과 중국(일본의 식민지배 밖에 있던 중국) 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1939년이 되면 사실상 교역 자체가 단절되는 수준까지 이른다.

1936년 초 일본과 국제 반공연맹의 필요성이 빌헬름가에서 회자되는 시점에 독일과 만주의 교역 규모의 확대에 따른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36년 경협을 대체할 독일과 만주국 간의 보다 직접적이고 확대된 새로운 포괄적 경협이 1937년 5월에 타결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체결은 이듬해 1938년 9월 13일에 있었다. 이러한 합의와 공식적인 체결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단 하나 조항 때문이었다. 지난 1936년에 체결되었던 경협 조항은 그대로 두고 나치 독일 측 담당자가 또 다시 무역 균형을 조항에 삽입시키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당시 독일 경제계에서 만주와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아무도 불

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독일 경제규모면에서 만주와의 무역 불균형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 정부 측 인사의 의의제기는 단순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도가 아닌 만주국 승인문제와 더불어 향후 일본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1937년 일본과 독일 간의 경제협약이 체결 되고 같은 해 다시 경제협약을 위한 추가 회담이 재기되었다.⁷⁾ 새로운 경협을 통해서 독일은 만주개발과 관련하여 해외 자본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려 했다. 협약 체결 이후 1938년 초가 되면 독일은 기존 94개 품목에서 더 확대된 200 여개의 품목을 만주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Ostasiatische Rundschau 19: 18: 422, 1938. 9. 16) 대부분은 기계와 건설 분야가 압도적 이었지만, 새로운 변화로서 군비와 관련된 물품이 급격히 증가했다. (Bundesarchiv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제국 경제부 R 11 and 1282d, 89) 이로써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주국 승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독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높은 물류비용과 독일정부의 가격통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독일 콩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만주의 콩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독일 수입상들의 불만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로 표현되었다. 즉 1937년 제 2차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도 독일의 대 중국 무기 수출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7) 기본적인 경협의 틀은 1937년 이전의 합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교역을 포함한 양국(독일과 만주국)의 다양한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경협위원회가 들어섰다.

IV. 만주에 대한 나치의 새로운 접근 (경제에서 문화로)

나치 독일에 있어서 1938년은 나치즘의 대내적 완숙기를 넘어 대외 팽창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한 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새로운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에 동아시아 내에서 진행되었던 다국적 접근이 포기되고 일본과의 교류 협력에 집중된 부분이다. 그중에서 만주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만주에 대한 기존의 경제적 관심이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문화적 협력을 위한 실무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이 원하는 만주개발을 위한 경제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38년 후반부터 나치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협력에 비해 부차적인 부분이 되고 말았다. 즉 양국 간의 교역에서 문화 관련 사업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 나치 독일이 추진 했던 일본과의 문화협력 사업이 일본 본토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1938년 문화협정 타결 이후 양국 간 문화협력 사업은 대부분 만주를 거점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몇 가지 사건과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첫째, 독일 외무부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었다. (베를린 외무부 문서보관소 R-61225) 즉 향후 반볼셰비키즘을 위한 공동전선으로서 만주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1938년 여름부터 동아시아로 흘러들어온 유대인 난민문제가 자리

하고 있었다. (Maul 2007, 35-36) 셋째, 동아시아 유대난민과 관련하여 나치는 일본의 만주 개발에 유대문화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Krebs and Martin 1994, 240-245) 특히 동아시아 내 유대인 난민 문제는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나치 독일의 대외 침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다. 즉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강제 합병으로 수많은 유대인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난민 행렬이 중국대륙으로 향하는데, 1938년 한해 대략 3000-4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상하이와 만주 등 중국 대륙 내 일본군 점령지로 흘러들어왔다. (Maul 2007, 78-79) 이러한 사태에 근거해 만주에 대한 독일 외무부의 입장은 1938년 중반 이래로 독일 국내의 유대정책과 연결되어 매우 복잡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게슈타포 동아시아 담당자들의 활동무대가 사실상 도쿄에서 상하이와 만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당시 일본 본토와 동아시아에 활동하고 있던 민족의 파수꾼(Volksbeobachter)들과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자들의 모든 관심이 동아시아 유대인 난민에 집중되었다.

또 다시 만주국 승인 카드가 독일 외무부에서 제기되었다. 유대인 난민 문제는 1938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던 양국 간 문화협정에서 하나의 의제로 시작되었지만, 곧 문화협정에서 유대인 난민 문제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의제였음을 양국 모두 깨닫게 되었다. 리벤트로프가 가지고 있던 일본과 자국 내 모든 인맥이 동원되어 1938년 문화협정이 한창 진행되는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양국의 '5개 부처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었다. 의제는 만주국 승인과 더불어 양국 간 다각적 협력 방안이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반유대주의였다. 심지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양국 간 문화협정의 다양한 주제

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중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당시 긴급하게 진행되었던 만주국 승인 문제가 ‘5개 부처 장관급 회담’에서 유대인 난민문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특히 ‘5개 부처 장관급 회담’에서 나치는 유대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협력 만주국 승인과 교환하려 했다. 때마침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국내에서는 제국 ‘수정의 밤’ (Kristall-Nacht)사건이 발생했으며, 유럽 내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정치적 조율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Jansen 1997, 2-3) 1938년 말은 최종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치의 권력 핵심부에서 나타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유럽 내 유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에 대해 나치의 외교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나치가 주도했던 1938년 7월 15일 에비앙 회담(Konferenz von Evian)⁸⁾은 뚜렷한 합의를 찾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에비앙 회담 이후부터 1940년 전까지 나치 독일은 유럽 내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공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당시 유대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나치 수뇌부는 읽고 있었다. 유대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유럽 내의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아시아 유대인 난민은 나치 독일에게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였으며, 동시에 긴급한 현안이었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의 정책적 기원이 있던 1941년 이전 나치의 유대인 정책은 ‘격리정책’(Isolierungsplan)이 원칙이었기 때문이었다. (황기우 2013, 659) 따라서 동아시아 유대인 난민의 유입은 나치 독일의 입장에서 ‘세계로부터의 격리’가

8)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전체 32개 국가가 독일 및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회의. Ibid. 2-3.

아닌 유대인들의 해방 혹은 탈출을 의미했다.

1938년 가을부터 시작된 유대인 난민 관련 일들은 그해 말에는 동아시아 특히 상하이와 만주 지역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1938년 이후 유대인 문제에 대한 나치의 계획 혹은 의도는 일본과 외교적 관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홀로코스트의 기원을 1938년 또는 1939년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선불리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39년 말 양국의 문화협정에서 유대인 관련 회담 내용은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⁹⁾ 그렇지만 일본의 만주개발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나치 독일의 의도는 1938년 말이면 분명해졌다. 또한 양국의 문화협정이 시작되기 전 히틀러가 일본 문화를 평가한 내용도 동아시아 유대난민문제를 의식한 결과였다. 따라서 향후 나치의 대일 외교의 기본 방향이 군사협력 분야를 제외하고 반유대주의를 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유대문화에 오염되지 않았다. [...] Japan niemals von Juden durchsetzt worden zu sein [...]” (Hitler 1936, 318)

일본문화에 대한 히틀러의 평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족과 문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 히틀러의 ‘민족 문화’에 대한 정의도 1936년 이후 일본과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원칙으로 작동했다. ‘민족 문화’에 대한 히틀러의 이해는 동아시아 내 유

9) 1938년 말 양국의 문화협정에서 유대인 또는 유대난민과 관련한 나치 정부의 목적은 동아시아 및 일본 본토 개발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배제하는 것이었다.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in Berlin, R-61225, Deutsche Kulturverträge Japan 1938. 11-1939. 06. 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인 난민문제가 발생하자 반유대주의를 위한 나치독일의 대일 접근의 동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책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민족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으며, 그 분류 기준은 문화의 세 가지 성격에 두고 있었다. 즉, 히틀러는 아리안족이 속한 ‘문화 창조민족’과 일본이 속한 ‘문화 계승민족’ 그리고 유대인이 속한 ‘문화 파괴민족’으로 민족과 문화를 동일시하고 동시에 민족의 차별과 문화의 차별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Ibid)

1938년 일본과 나치 독일의 문화협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1936년 양국 간 반공협정의 확대 의미가 지배적이었지만, 협상 과정 막바지에 양국의 5개 부처 장관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 그리고 회담의 주요 내용이 반유대주의였다는 사실은 당시 동아시아 내 유대인 난민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치 정부가 향후 주도권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대 난민의 증가는 만주 개발에 있어서 나치의 적극적 참여를 이끈 배경이기도 했다. 실제로 만주 개발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에서 나치의 투자는 1939년부터 반유대주의를 전제로 하게 되었다. (황기우 2016, 276-278)

V. 결론 (Civilization을 위한 반유대주의)

일본의 ‘대동아공영’에 대한 나치 독일의 반응은 파트너 국가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혹은 지정학적 관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세상의 질서를 “죽느냐 살아남느냐”(Sein oder Nichts)라는 극단적 대결 구도로 바라본 나치에게 있어서 일본의 ‘대동아공영 계획’은 단순한 식민지 지배가 아닌,

‘적자생존’의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민족적 성취이자 미래의 청사진으로 평가되어졌다.(Sommer 1962, 19)¹⁰⁾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계획에 나치 독일은 자신이 희망한 인종적 가치를 포함시키고 싶어 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나치가 말하는 인종주의란 반유대주의를 겨냥하는 것이었다. 히틀러가 말한 ‘최후의 전쟁’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은 독일과 우호관계에 있을 민족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치에게 있어서 일본 내 유대문화의 영향 혹은 그 흔적은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1938년 동아시아 내 유대난민의 급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만주개발과 일본 사회의 근대화에 이용하려는 일본 당국의 움직임은 나치의 외교력을 총 동원할만한 긴급한 일이었다. 1938년 겨울 양국의 5개 부처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기 전 로젠베르크(Rosenberg)를 중심으로 독일 문화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타락한 민족으로부터 일본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창조적인 아리안 문화를 심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동아공영 계획의 시작부터 유대인의 영향력을 차단시켜야 했다. (Hitler 1936, 657) 때마침 일본이 ‘대동아공영’의 중심지가 될 만주 개발의 목적과 정당성을 서구의 문명화(Civilization)라는 이론에서 찾고 있었다. 특히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일본의 미래를 독일 사회에서 찾은 이후 일본의 ‘문명화 담론’(Discussion of Civilization)은 나치 독일과의 정치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Kreiner/Mathias, Op. cit. 349) 공교롭게도 히틀러는 1938년 하반기에 와서 국내 대중연

10) 1938년 독일 외무부는 일본을 세계 3대 파시스트 국가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나치 독일의 향후 세계 질서에 일본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

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방문연설에서도 문화 파시즘(Kultureller Faschismus)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Sommer, Op. cit. 19) 당시 고노에 후미마로가 추구한 일본의 미래도 파시즘이었으며, (Ostwald 1941, 109-113) 이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식민지 계획에 나치 자신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될 수 있었다. 더불어 나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부여했던 지식인들이 파시즘을 서구의 근대성이 갖는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사상으로 승격시킨 사실은 일본 엘리트에게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일본과의 파시즘 공유를 위한 노력은 나치 독일의 권력 핵심부에서 시작되었다. 나치는 인종과 문화를 합성해 인종문화(Rassenkultur)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문화적 연대의 가능성을 인종적 범위 안에 두려고 하였다. 하지만 193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독일의 파시즘은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인종적 차이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승격된다. 우선 양국의 5개 부처 장관급 회담에 즈음하여 나치 독일의 수뇌부 특히 독일 외무부 내에서 리벤토프(Ribbentrop)가 중심이 되어 일본인에 대한 새로운 인종적 평가가 진행되었다. 기존 1935년 발효된 뉘른베르크 인종법(혈통보호법)에서 일본인들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과 같은 두 번째 지위를 갖는 민족이었다. (Hoffend 1988, 357) 하지만 1938년 말을 계기로 일본인에 대한 인종적 평가가 두 가지 면에서 새롭게 진행되었다. 하나는 비아리안 문화도 문화적일 수 있다는 평가였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들을 직접적으로 아리안 인종의 후손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었다. (Kreiner 1984, 269-271) 하지만 이 두 가지 노력은 나치의 새로운 인종법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이유는 양국 간의 외교 분야에서 인종문제가 더 이

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년 양국 간 반공협정이 진행되기 전 일본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민족적 멸시는 한 때 양국 관계를 파국의 위기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이젠 반유대주의를 위한 공동 노력과 그것을 위한 ‘문화의 축’(Kultur-Achse)¹¹⁾이라는 새로운 혼장이 일본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사실상 나치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문화의 축’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을 위해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일본은 자신의 식민지 침탈을 동아시아 문명개화의 소명(Mission of Civilization)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매마침 서구사회의 주류 국가인 독일이 ‘문화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에게 동등한 문화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나치가 말하는 ‘문화의 축’은 반유대주의라는 증오의 이데올로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따라서 ‘문명개화의 소명’은 자동적으로 반유대주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의 축’에 일원이 된 대가는 일본인들에게 아직 치러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반유대주의라는 생소한 이데올로기로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문명화된 일본이 가져야 할 문화적 가치 사이의 모순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것은 서구 사회가 아닌 나치 독일의 ‘근대성’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었다. 나치는 당시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역사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나치 독일의 모더니티는 오지 않은 미래만을 요구함으로써 현재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당위적 가치

11) 문화의 축Kultur-Achse는 1938년 나치 독일과 일본이 문화협정을 맺은 후 양국 간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키기 위해 나온 나치 독일의 외교정책이다. 보통 독일-이탈리아-일본으로 이어지는 추축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나치의 민족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를 대신 설정했다. 파시즘의 생명력이기도 한 ‘부정을 위한 부정’은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게도 방향성을 상실한 모더니티였다. 나치에게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이고 인과적 시각은 중요치 않다. 이러한 사고는 열등의식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문명화된 사회가 가져야 할 가치라면 빌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일본은 반유대주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즉 나치의 근대성은 파시즘의 다른 이름이었고, 일본은 만주개발을 위해 그것을 수입했다. 바로 이런 면에서 1938년 이후 반유대주의를 위한 나치의 대일외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선 일본 정부는 본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 문학가, 예술가 등을 쫓아냈고, (Krebs/Martin 1994, 246) 향후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도 제외시킴으로써 문화의 축 일원으로서의 약속을 이행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반유대주의의 문화적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본토에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지역에서 반유대주의는 관동군이 중심이 되어 사상적 무장이 상당정도 진행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수의 관동군 장교와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의 몰락을 원했던 유대인들의 음모”(jüdische Verschwörung) (Goodman/Masanori 1995, 248-251)을 믿고 있었다. 특히 관동군 장교들은 볼셰비키혁명과 이후 소련의 대일 적대적 태도 뒤에 항상 유대인을 의심했다. (Ibid. 248) 이러한 관동군 내의 반유대주의는 과거 백러시아군과의 조우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Ibid. 129) 제 2차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1938년부터 나치 독일의 선전활동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치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문화의 축’에 포함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만주에서 활발했다. 특히 관동군 장교들과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치즘의 성경’(Bible of Nazism)이라고 불리는 로젠베르크의 저서 ‘20세기의 신화’(Der Mythos des 20. Jahrhunderts)는 일본 정부에 의해 권장되었으며, 일본의 반유대주의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황기우 2013, 668) 그 외에도 나치 집권 기간 동안 대략 800여 종류의 반유대주의 서적들이 일본의 젊은 장교들에 의해 번역되거나 그것에 대한 해설서가 나오기까지 했다. 사실상 1938년 이후 반유대주의는 만주 내 젊은 세대(주로 일본군 장교)의 교양이 될 수 있었다.

독일의 역사학자 에버하르트 프리제(Eberhard Friese)가 “**나치즘의 끝은 일본과 연결 된다**”(Friese 1984, 265)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나치의 세계관이 일본 엘리트 계층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세기 편협한 문명화 담론 속에서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의식은 나치 집권 이후 통폐합원칙(Prinzip der Gleichschaltung)과 함께 편협하고 왜곡된 국가주의로 더욱 축소되고 말았다. 바이마르 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원적이고 열린 시민의식이 통폐합의 원칙에 의해 짧은 시간에 사라진 이유는 무엇보다 근대성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Wehler 2009, 186) 물론 독일 대중들의 반근대적 정서는 히틀러 집권을 전·후해서 나치 프로파간다의 영향이 가장 컸다. 또한 이러한 반근대성이 나치의 새로운 시민의식으로 이어짐으로서 나치의 대중동원을 가능케 했다. 그런데 나치가 생각했던 반근대성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대성 용어 자체를 폐기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근대성이란 협소한 국가

주의에 함몰된 모습이였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에 대한 불안과 패배의식의 반영에 불과했다. 그런데 나치의 반근대성이 서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모습을 갖추면서 독일인이 가져야할 새로운 시민의식은 대중동원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고노에 후미마로가 극찬한 “독일적인 것”도 바로 통폐합된 독일사회와 그러한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볼셰비키혁명의 공포를 가로지르는 공통분모가 반유대주의라는 점에서 일본의 젊은 관동군 장교들은 반유대주의를 근대적인 부분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은 미야자와 마사노리의 저서에서 이미 명백히 확인되어지고 있다.¹²⁾

일본의 반유대주의는 대중적 성격의 문화운동이 아닌 나치 독일과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만주 개발과 관련하여 나치 독일의 영향력은 단순한 정치적 거래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적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일본 식민지 침탈의 사상적 정당성을 부여한 ‘문명화 소명’(Mission of Civilization)은 나치의 문화의 축(Kultur-Achse) 안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나치 독일은 문화의 한 축으로서 일본의 문화적 지위를 1938년에 문화협정을 통해 인정했으며, 동시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만주국 승인 문제를 완결했다. 나치의 만주국 승인은 정치적 이해관련을 정리한 결과였지만, 19세기 서구 식민주의가 편협한 사회 진화론적 이론을 통해 나치 독일에 이어 일본으로 이어진 것을 뜻한다.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

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Duara 1989, 99) 라는 서구 사회의 특권은 1938년 말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에게도 허용되었다. 이로서 만주는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문명개화’의 실험 장소였으며, 동시에 나치에게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화 운동에 반유대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교두보였다.

12) 미야자와 마사노리는 자신의 저서 *Jews in the Japanese Mind*에서 일본 군부 특히 관동군 출신의 젊은 장교들이 “유대인들이 일본의 몰락을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Op. cit. 248-251.

참고문헌

- 박현미, 2006. 『쇼와사 1926-1945, 루비박스』
- 전진성, 2015.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 도쿄 · 서울(기억과 건축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 천년의 상상.
- 황기우, 2013. 나치의 대일 문화외교를 통해 본 반유대주의의 의미, 사림史林.
- 장준호, 2000. 『중국의 도시계획: 만주의 도시론』 태림문화사.

Non-Korean References

-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in Berlin R-61439, Deutsch-japanischer Kulturausschuss 5. 1939-4. 1940 Bundesarchiv, Wirtschaft -Ministerium R 11/1282d.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in Berlin, R-61225, 1938, Nr.323. R 61440.
- Adam. 2003. Uwe Dietrich, Judenpolitik im Dritten Reich, Düsseldorf.
- Bernd, Martin. 1990. Das deutsch-japanische Bündnis im Zweiten Weltkrieg, Bonn: Verlag-Bonn.
- David, Kranzler. 1971. the History of the Jewish Refugee Community of Shanghai, 1938 – 1945, New York: Lexington Books.
- Duara, Ni. 2001.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Berlin: NDV.
- Düwell, Kurt. 1981. Die Gründung der Kulturpolitischen Abteilung im Auswärtigen Amt 1919/20 als Neuensatz, Inhaltliche und organisatorische Strukturen der Reform auswärtiger Kulturpolitik nach dem Ersten Weltkrieg, Köln: Verlag-Kölner.
- Düwell, Kurt. 1976. Deutschlands auswärtige Kulturpolitik. 1918-1932. Grundlinien und Dokumente, Köln: Verlag-Kölner, 1976.
- Funke, Manfred, Die deutsch-italienischen Beziehungen. Antibolschewismus und außen politische Interessekonkurrenz als Strukturprinzip der Achse, Düsseldorf: Uni-Verlag.
- Gandhi, Leela. 1998.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VGK.
- Goodman, David and Masanori Miyazawa. 1995. Jewish in the Japanese Mind, The History and Uses of a Cultural Stereotype, New York: Lexington Books.
- Gustav, Fochler-Hauke. 1941. Die Mandschurei, Heidelberg, Berlin, Magdeburg: Verlag-SD.
- Haug, Wolfgang Fritz. 1964. Aufbruch in die Illusion. Zur Kritik der bürgerlichen Philosophie in Deutschland, Berlin: Uni.-FU.
- Hilberg, Raul. 1990. Die Vernichtung der europäischen Juden, ed. 1, Frankfurt Am Main: Uni-Frankfurt.
- Hitler, Adolf. 1933. Mein Kampf, Zwei Bände in einem Band, Ungekürzte Ausgabe, 63. Auflage, München: Verlag- Münchener, 1933.
- Hoffend, Andrea. 1988. Zwischen Kultur-Achse und Kulturkampf. Die Beziehungen zwischen Dritten Reich und faschistischem Italien in den Bereichen Medien, Kunst, Wissenschaft und Rassenfragen, Frankfurt am Main: Uni-Frankfurt.
- Jansen, Hans. 1997. Der Madagaskar-Plan. Die beabsichtigte Deportation der europäischen Juden nach Madagaskar, München: Verlag- München.
- Krebs, Gerhard and Martin. 1994. Bernd, "Formulierung und Fall der Achse Berlin-Tokyo". Monographien aus dem Deutschen Institut für Japanstudien der Philipp-Franz-von Siebold-Stiftung, Bd.8., München: Uni-München.
- Kreiner, Josef. 1984. Deutschland-Japan Historische Kontakte, Bonn: Bouvier-

Verlag.

- Maul, Heinz Eberhard. 2007. Warum Japan keine Juden Verfolgte. Die Judenpolitik de Kaiserreiches Japan während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1933 – 1945), München: Iduicium
- Merker, Reihard. 1983. Die bildenden Künste im Nationalsozialismus. Kulturideologie Kulturpolitik Kulturproduktion, Köln: Uni-Köln.
- Michalka, Wolfgang. 1980. Ribbentrop und die deutsche Weltpolitik, 1933-1940. Außenpolitische Konzeptionen und Entscheidungsprozesse in Dritten Reich, München: Verlag-SD.
- Petersen, Jens. 1988. "Vorspiel zu Stahlpakt und Kriegsallianz. Das deutsch-italienische Kulturabkommen vom 23. November", in: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Jahrgang 36, Berlin: Uni-FU.
- Röhr, Werner. 1992. Faschismus und Rassismus. Kontroversen um Ideologie und Opfer, Berlin.
- Ruck, Michael. 1992. Führerabsolutismus und polykratisches Herrschaftsgefüge – Verfassungsstrukturen des NS-Staates, Bonn: Verlag-Bonn.
- Schweitzer, Arthur. 1964. Big Business in the Third Reich, London.
- Sommer, Theo. 1962. Deutschland und Japan zwischen den Mächten 1935–1945, Tübingen: Paul Siebeck.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Jeon Jin-Seong, 2015. *The fictive Athens, Berlin, Tokyo, Seoul*, chonyeoneu sangsang.

Park Hyun-mi. 2006. Handou kaztosi, *Showasa, 1926-1945, Tokyo*.

Jang Jun-Ho, 2000. *City Plan in China: City Theory of Manchu* Tearim-munhwasa.

Hwang Ki-Woo, 2013. *The sense of the antisemitism in the policies of the National Socialist towards Japan*, Sarim.